

교원과 교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관은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학교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7개 학기 동안 교원 171명을 임용하면서 신원 조사나 결격 사유 조회를 하지 않았다. 또한 교원 11명을 임용하는 과정에서는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지적됐다.

특히 교육부는 ‘지원자의 자격에 대하여 자격 점수 2점을 부여하지 않아 합격권 내 순위였던 이가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인사소위원회의 심의 없이 교원을 채용하거나, 총장 면접 대상자의 채용을 중단하는 등 교원 임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우리학교 기획조정처 감사실(감사팀)은 “관련자에 대한 처분 조치는 진행 중이고, 감사 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 역시 감사팀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면서도, “선의의 피해를 보는 구성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각 사안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부적절한 학점 부여
학사 운영 문제 지적

학사 운영 중에는 ▲강의계획서 미입력 ▲학점 기준 초과 ▲성적 산출자료 미보관 등이 지적받았다. 강의계획서 미입력 문제는 이번 감사에서도 경고 대상이 됐다. 매학기 단과대학이 두 차례에 걸쳐 강의계획서 입력을 요청하고 있지만, 7개

학기 동안 강의계획서가 입력되지 않은 과목은 246개에 달했다. 교육부는 강의계획서를 입력하지 않은 67명의 교원을 경고 조치하고, 학교 측에 인포21을 통해 강의계획서가 입력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학점 표준화 제도’에 따른 학점 기준의 적용에서도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다수 드러났다. 우리학교의 학칙과 학점 표준화 제도는 ‘B+’ 이상의 학점을 40% 이내의 수강생에게만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5개 학기 동안 해당 기준을 초과한 과목은 3,330개였다. 이에 우리학교는 규정에 따라 성적을 부여하라는 통보와 동시에 경고 처분을 받았다.

휴강 후에는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보강을 진행해야 한다는 학교 규정을 지키지 않은 교원들 역시 이번 감사를 통해 경고 처분을 받게 됐다. 6개 학기 동안 교수 18명이 보강 계획서도 제출하지 않고, 보강도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해당 교수들이 보강을 하지 않은 수업시간은 총 85시간 30분에 달한다. 이외에도 ▲8,827개 교과목의 성적 산출 근거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건과 ▲출석일수 미달자에게 성적을 부여한 문제에 대해 각각 경고 처분이 이뤄졌다.

양 캠퍼스 총학
“해결 어려울 정도의 비위 없었다”

4월 1일 우리학교는 양 캠퍼스 총학생회와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시정 계획을 밝히고, 5일에는 총장 서신을 통해 유감 표명과 함께 즉각적인 조치를 약속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교직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남우석(철학 2018) 회장은 “대학교육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하고 자체적인 검토도 진행했으나 해결이 어려울 정도의 비위 행위나 구조적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고, 조속한 시정에 대해 학교 측과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의지를 갖고 조치에 나선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 판단되는 만큼 우리학교의 진정성 있는 대처를 기다리겠다”며 감사 결과 전반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다만 “등록금 회계와 비등록금 회계를 구분하지 않은 문제 등은 정상화 과정에서도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학교 측과의 논의 방향을 밝혔다.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전완주(일본어학 2015) 회장은 “(종합감사 결과) 대학 자체의 재정력이 약했던 것이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 재정력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많았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일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 만큼 대학본부가 적극적으로 시정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 회장은 이어 “감사 결과가 발표된 바로 다음날인 4월 1일 총장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다”며 “이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실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감사팀은 이미 “올해 1월 처음 교육부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이후 조치를 시작했고, 관련자에 대한 처분 및 규정 개선 조치 또한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종합감사 결과의 이행 여부와 제도 개선, 행정 계도에 중점을 두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후마 교수 미얀마시위 지지 선언

이태영 기자 ysmhip6@khu.ac.kr

지난 9일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진(강내영 교수 외 85명)이 ‘미얀마는 우리의 얼굴이다’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앞서 미얀마 군부는 2020년에 이뤄진 미얀마 총선거에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쿠데타를 일으킨 바 있다. 미얀마의 시민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는 지난 1일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 54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아동구호단체인 ‘세이프 더 칠드런’은 같은 날 쿠데타로 최소 43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했다.

교수진은 성명문을 통해 “미얀마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 도중 사망한 19세의 대학생 쟈 신(Kyal Sin)을 비롯한 수많은 청년들의 의로운 죽음은 우리를 숙연케 한다”며 “군부는 쟈 신의 무덤마저 파헤쳐 시신을 강탈해 갔다”고 밝혔다. 이어 “(미얀마 군부의 행위는) 야만의 극단이다”라며 군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교수진은 “한국은 미얀마 군부를 괴물로 만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며 “한국 정부와 기업이 현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미얀마에 대한 투자를 즉각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롯데호텔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부와 직간접적인 투자 사업을 벌인 것을 염두에 둔 주장이다. 교수진은 이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의지와 결단을 촉구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48개국이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력을 높이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한 행동규범이다.

교수진은 “우리 헌법에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을 표방하고 있다”며 “국가예산이 투입된 사업과 해외 투자에 이르기까지 환경과 인권 등의 가치를 우선하고, 이를 민간에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 일동은 마지막으로 “후마니타스 칼리지 구성원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미래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놓치지 않으면서 분투해갈 것”이라며 “그 길에 도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다면 귀 기울이고 기꺼이 연대의 손을 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도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하며 지난 6일부터 #SaveMyanmar #PrayforMyanmar 해시태그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캠 남우석(철학 2018) 총학생회장은 “우리들의 관심이 직접적인 도움은 되지 못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문제 제기 및 공론화를 통한 끊임 없는 관심과 연대는 그 자체로 저항하는 이들의 정신적 지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민주주의·자유의 의미를 담은 ‘세 손가락 경례’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 됐다. (사진=연스플래쉬)



교육부 종합 감사 결과 경영대학원이 신입생 모집을 위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강민희 기자)